

영재고 입시 55.2% 中 교육과정 밖 출제

신경민의원 · 사격세 8개 영재고 입시 문제 분석 총 239개 문항 중 132문항 위반 “사교육 부추겨”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영재고) 신입생이 치른 입학 수험시험 문제 절반 이상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재고 입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특정지역 출신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8개 영재고에서 받은 2019학년도 입학 수험시험 문항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9개 문항 중 132문항(55.2%)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2명의 현장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학교에서의 학습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 위반 의혹이 있는 문항들은 대학 수학과 전공과정에서 배우는 정수론, 조합론, 기하학, 이산수학, 대수학 등은 물론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에서 출제되는 문항들로 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므로 특정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항들”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영재고가 중학교 교육과정 위반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학교는 이런 문항이 전체의 7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영재고 입시가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민 의원은 “진정한 영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재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단순히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은 영재가 아닌 사교육 영재에 불과하다”며 “단 한 번도 영재학교에 대해 들어다 보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반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8개 영재고 입학생의 70.1%가 사교육이 활발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서울·경기지역 출신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

와 기회의 반복된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적·경제적 특권이 보장되는 시험 문제 풀이 방식의 입학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는 지역별·계층별 분리교육의 상징인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한복의美 '한복의 날'을 맞아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공개 한복을 공개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복의 날'은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됐다.

환자 1명이 '졸피뎀' 1만1456정 구입...국내 처방환자 176만명

‘고유정 사건’으로 일반에 알려진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Zolpidem)을 연간 1만정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항정신성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매일 30정 넘게 복용해도 남은 양이다. 투약이 금지된 소아·청소년 환자들도 최근 1년간 4647명이 졸피뎀을 12만정 정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 소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처방한 졸피뎀은 1억3800만정이 넘고 처방환자 수도 176만명이었다.

이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환자 4831명에게 37만8000여정의 졸피뎀이 처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29명 중 1명꼴로 항정신성 졸피뎀을 처방받은 셈이다.

극단적으로 졸피뎀을 많이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환자 A씨는 최근 1년간 4개 의료기관에서 119번에 걸쳐 졸피뎀 1만1456정을 처방받았다. 365일 동안 매일 31정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현재 A씨는 식약처 고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1년간 96개 의료기관에서 105명의 의사로부터 졸피뎀 2667정을 처방받은 50대 환자 B씨도 식약처 감시에서 확인됐다. 졸피뎀은 성인을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이 10밀리그램(mg)이며,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 따라 투약이 금지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4647명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졸피뎀 11만9104정을 처방받았다. 10대 환자 1명이 2개의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610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졸피뎀은 수면제 일종으로 졸

피뎀 타르타르산염(Zolpidem tartrate)이 함유된 알약 형태로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다. 다른 수면제보다 약효가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이 항정신성 약을 오남용하면 환각 증상을 일으키거나 중독성이 생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졸피뎀 부작용 사고는 총 3346건이었다. 그중 자살 7건, 자살시도 15건, 자살경향 5건, 자살을 제외한 사망사고도 25건에 달했다. 청소년 부작용 사고는 최근 5년간 8건으로 파악됐다.

김상희 의원은 “수면제 의료소평이 심각한 만큼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 영산강 뱃길복원 후원 비판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21일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위원회가 죽산보 준지를 제목으로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 이를 후원한 것으로 밝혀진 나주시와 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으로 수질환경 악화와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 방치하다 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

택,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 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며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고,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판결

**태양광발전소 차명소유·뇌물수수
한전 간부 3명 ‘징역형’ 선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만원 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 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B씨(5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C씨(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기술검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 D씨(64)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태양광발전소 전력연

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이었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B씨는 2013년 1월, 같은 방법으로 D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C씨 역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부정행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피,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라치로공, 자라치로 공인 인허가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지 의료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